



무엇이 世界化인가

金 秉 柱 (연구자문위원, 西江大 教授)

3월초 정부는 「世界化」의 공식 英文표기를 「Segyewha」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 지역국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金대통령이 선언한 이래 「世界化」를 국정지표로 삼아왔던 불과 3개월 여만에 일어난 해프닝이다. 정부측 설명으로는 「世界化」의 영문표기를 「globalization」으로 하니 국내외에서 「한국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외국인에게 영어식 표현으로 부연설명하는 용어로 「total globalization policy」라고 쓰기로 한다고 한다.¹⁾

이같은 英文표기 변경소동은 당초부터 정부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로서 「세계화」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목표로 등장한 「세계화」가 종전의 「국제화」와 어떻게 다른가. 공간적 영역확대를 선호한다면 다음에는 「宇宙化」(이를 영문으로 universalization이라고 표기하면 평범하게 「보편화」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intergalactization이라는 新造語를 쓰기로 하면 어떨까) 짚을 국정지표로 삼아야 보다 거창해 보일 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점은 구호가 거창할수록 그 내실은 공허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이 1993년 봄 국정을 맡은 이래 주로 국내의 과거지사에 매달려온 사실에 비추어 해외여행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국정의 좌표를 국내에서 해외로, 과거에서 미래로 돌려잡은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3월 유럽순방 이후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를

1) 중앙일보 사설 (1995년 3월 7일자)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企業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내비친 일련의 발언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정부가 「司正」과 「改革」의 이상주의적 가치를 휘날리며 대기업집단들에 대하여 전개해 온 대결적 국면을 해소하고, 격화되는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와 기업이 협력관계를 다지는 바람직한 변화의 조짐이다.

세계화문제에 관한 연구자 가운데 아마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센터의 Charles Oman이 돋보이는 소수의 연구자 중 하나일 것이다.²⁾ 그에 의하면 오늘날 주목되는 세계화는 다음 네 가지 현상의 동시적 발생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지도력이 냉전종식과 소연방 해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되는 현상이다. 둘째는 '70년대 후반 이래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에 힘입은 세계적(global) 금융시장들의 급속한 성장이다. 셋째는 역시 정부규제완화와 기술혁신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實物」부문의 기업활동도 세계화되고 있다. 이는 지구전체를 커버하는 기업간 업무제휴와 경쟁을 동시에 심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현상은 '80년대 후반부터 오존 고갈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지구전체차원의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경제문제)들에 대하여 강대국일지라도 개별국가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일반의 인식이 고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외국전문가들이 말하는 세계화는 국제정치, 경제, 과학기술, 환경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상들을 인지하여 압축표현하는 용어로서, 정책당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책의 슬로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현상의 주역은 정부라기 보다는 오히려 민간기업들이며, 그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이며 기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한국이 세계화되는 현상들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설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용어인 「국제화」가 보다 적절하고, 관계공무원들의 혼돈과 일반국민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세계화」이건 「국제화」이건 한국경제의 진로는 對外指向性を 심화하는 길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부존자원조건,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면 논리의 자명한 결론이다. 올해 초 출범한 WTO(세계 무역기구)가 재화형태의 상품은 물론 서비스부문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교역확대를 위해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세계 11위 교역국에 어울리는 정책기조변화가 마땅하다. 말하자면 운동경기장이 어느 한편에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는 경우 이를 「평평한 운동장(level ground)」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책임감있는 국제교역국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팀에 유리하게 판정하던 지난날의 낡은 폐습에서 벗어나 운동경기의 규칙을 이제는 국내외 팀에 모두 불편부당하게 적용하여야 한다.³⁾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정책당국의 사고발상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면 다

2)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 The Challenge for Developing Countries" (OECD Development Centre, January 1994) Unpublished Paper.

3) 이를 달리 표현하면 世界經濟研究院 司空 壺 理事長의 비유하는 바처럼 전후반전 골문 바뀔을 모르는 우둔한 축구선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가 된다.

음과 같다.

가장 근본적 전환은 정부의 對기업관계에서 기대된다. 이것은 결국 기업활동의 입지문제와 직결된다. 종전의 폐쇄적 국민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가 경제활동주체들을 자국의 국경내에 갇힌 존재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력있는 기업이나 재능있는 개인들은 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나 조세 등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국경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의 활동무대를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다. 국내의 각종 규제가 국제수준보다 상대적으로 구속적일수록, 그리고 조세율이 높을수록 기업활동의 본거지 해외이전 경향이 촉진된다.

여기서 유명한 「누가 우리 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⁴⁾ 하나의 손쉬운 예를 본다면 자국의 A기업이 국내의 정부규제, 조세, 노사분규에 시달리다가 경제활동 본거지를 해외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고용증대, 법인세 납부 등을 통하여 기여하는 정도가 자국 내에서보다 큰 반면에, 외국의 B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역시 고용창출, 기술이전, 조세납부 등을 통하여 국내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A기업보다 크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느 기업이 과연 「우리 기업」인가? 이처럼 명목상의 국적보다는 국민경제적 기여라는 내실을 따지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어울리는 계산척도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적의 구별없이 기업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들을 국제수준에 비추어 조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처럼 국경의 담장이 낮아지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정부의 산업정책 특히 對기업정책도 변모하여야 한다. 소수의 재벌들이 지배하는 국민경제는 사회정의 의식, 국민소득의 분배는 물론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이 비록 불변의 진리라고 하더라도 국내시장개방화 시대에는 종전의 공정거래정책기조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세계는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의 小人國(Lilliput)과 巨人國(Brobdingnag)들처럼 경제규모의 차가 심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말하자면 갑자기 중간정도의 몸으로 자라고 있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개방화 이전의 소규모 폐쇄경제단계에는 국내시장만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들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 국내산업을 보호하면서 자국기업들의 대외시장공략을 지원해도 타국의 지탄을 면할 수 있었던 단계에서는 다소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으며, 해외수출시장에서의 자국기업경쟁력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자국의 교역규모가 신장하여 국내시장의 개방이 대외협상에서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자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된다. 이같은 단계에 이르러서는 중간규모경제의 이른바 대기업이 거대규모경제의 대기업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늠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의 공정거래당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경기규칙을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내기업들만을 상대하는 경우보다 유효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재벌정책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4) "Who is 'us'?"는 다음 저서의 결론 제목 참조. Robert B. Reich, The Work of Nations (Alfred A. Knopf, New York : 1991)

정태적인 공정분배 못지않게 동태적인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우리의 기업」들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유념할 사항은 경제정책의 主權(sovereignty)개념이 퇴색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재정금융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G7」, OECD등에서 합의되는 정책방향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경제정책의 흐름을 미리 내다보고 사전적으로 국가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의 막후실력자들과 친분이 두텁고, 경제논리를 설득력있게 전개할 수 있는 한두 명의 경제외교담당 전문巡廻大使를 두는 제도를 건의하는 바이다. 이것이야말로 세계화시대 主權을 확보하는 핵심과제라 일컬을 수 있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사(1962), 경제학 석사(1965)

미국 Princeton 대학교 경제학 박사(1976)

한양대학교 교수(1967~70)

서강대학교 교수(1970~현재),

경제정책대학원장(1990~현재)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위원(1982~95), 위원장(현재)

세계발전심의회위원회 위원(1984~현재)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1986~91)

세계경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1993~현재)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1994~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